

寧越댐 後續對策

(2000.10.24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2000. 10.

國 務 總 理
水 質 改 善 企 劃 團

順 序

I. 推進經緯

II. 共同調查團 建議

III. 對 策

IV. 後續措置

I. 推進經緯

- '90. 9월 한강대홍수 발생(일산제방붕괴, 영월단양 침수)을 계기로 추진
 <영월댐> : 높이 98m, 저수량 7억톤, 홍수조절 2억톤, 용수공급 3.7억톤
- '91~'97 : 타당성조사('91), 설계('96) 및 댐건설예정지 고시('97.9)
 * 예정지 지정고시는 건축물등의 신증축시 허가사항으로 함 (682만평)
- '98. 3 : 환경단체에서 댐건설반대 운동 개시
- '99. 9~2000. 5 : 영월댐건설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 관련부처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5개분과 34명으로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위원장 : 박원훈)
 - 조사결과, 동강유역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존가치가 탁월하므로, 영월댐 건설은 중단됨이 바람직하며 물부족과 홍수조절 문제등은 별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
- 2000.6. 13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관)에서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을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
 - 영월다목적댐 건설 백지화대신 민간공동조사단이 건의한 물부족, 홍수문제, 동강보전, 수물민대책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하여 차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함
- 2000.10. 14 : 관계기관 실무 국장회의
- 10. 23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개최

II. 共同調査團이 建議한 事項

□ 洪水

제시한 문제점	대안
‘84, ’90년과 같은 한강대홍수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한강 주변도시 및 수도권의 홍수방지 대책이 필요	1. 한강주변 제방보강으로 범람 방지 2. 집중호우시 도시내수 침수를 방지할수 있도록 시설 정비 3. 녹색댐 개념의 산림정비를 통해 홍수시 일시 유출량을 줄일수 있는 대책 마련 4. 도시계획 단계부터 방재도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 추진 검토 5. 평시에는 물을 저류하지 않아 장기수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 홍수시에만 일시 저류시켜 하류의 홍수피해를 막을수 있는 통수식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방안 검토

□ 물不足

제시한 문제점	대안
2011년 한강의 물부족은 18.8억톤(현수요량 132억톤의 14%)으로 추정되므로 물확보 대책필요	1. 팔당, 화천댐등 발전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한강수계 수력발전댐들을 용수 및 홍수조절 기능 위주의 다목적댐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공으로 관리 일원화 추진 2. 공급위주의 물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물 절약정책등으로 전환하고 범국민운동 전개 3. 위의 대책들이 순조롭게 되더라도 약 4억톤 정도의 물부족은 피할수 없으므로 신규댐 건설등 새로운 수원확보 대책 필요

□ 東江의 環境保全

제시한 문제점	대안
동강의 자연보전을 위해 영월댐건설이 취소되었으므로 동강지역의 훼손방지 대책 필요	1.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 이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필요 2.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오히려 자연친화적 생태관광등 지역경제가 지속 성장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

□ 地域住民 支援

제시한 문제점	대안
○ '90년 댐건설 발표이래 - 농로, 농지개량 사업지원등의 중단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편을 겪었으며 - 수몰예상지구이므로 저금리 영농관련 융자 지원이 어려워 주민들은 고금리의 상호금융 부채등으로 상대적인 손실을 입어왔음 - 또한 장기간 댐건설 논란으로 장래생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 ○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적절한 보상대책이 필요함	1. 본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이주시키도록 함 2.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소득기회를 제공

Ⅲ. 對 策

1. 洪水對策

□ 관계기관 제출안

기 관	내 용
건교부	1. 하천개수사업 촉진 · 국가하천(2,851km, 개수율 98%), 지방1 급하천1,265km, 86%) 및 2급하천(31,998km, 63%)의 개수완료를 당초 2011년에서 4년 앞당긴 2007년까지 조기 추진 ·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 2. 홍수에경보시설 확충 · 현재의 10대강에서 2001년까지 전국 13대강 및 7개 주요지천으로 확대하여 사전에 홍수대피 경고 3. 방재도시화 추진 · 도시내 유출수를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도시내수 침수를 방지할수 있는 유수지 설치 제도화등 도시기본계획 관련 규정 정비 4. 자연통수식 홍수조절댐 건설 필요 · 홍수시 한강인도교 수위(위험수위 10.5m)를 0.9m 저하 효과 · 홍수시 댐에 저류되는 기간은 최대 3~4일에 불과해서 다른댐과 비교시 환경영향피해 최소화 가능 · 소요 사업비는 5,632억원으로서 B/C는 0.31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치수사업은 경제성으로만 결정하기 곤란 * 불가능시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확보차원에서 최소한 발전댐의 다목적댐화 절실

기 관	내 용
행자부	1. 방재도시화 추진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재해영향평가 대상을 현재의 16개 대규모 사업장에서 과밀지역의 중소규모 시설에도 2001년부터 확대 시행계획 (재해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추진)
산림청	1. 산림정비를 통해 홍수시 일시 유출량 저감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계획」을 '95 ~2007 간 추진 (5대강 본류 양안 5km 이내 101만 ha)
환경부	1. 홍수조절댐 건설 반대(다른 대안이 필요) 홍수조절댐은 당초 영월댐과 유사한 정도의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므로 홍수조절댐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필요
강원도	1. 홍수조절댐 건설은 반대 - 홍수조절댐은 다목적댐과 비슷한 정도의 사업비가 들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이 문제되며, 효과성도 의문스러움. 또한 댐건설 논란 재론은 바람직하지 못함 2. 한강수계 기존댐의 댐관리체계 조정 필요 - 한강수계에 기설치된 10개의 댐관리체계를 연계 조정하는 것이 홍수조절에 더 효과적일 것임

□ 對 策

1. 하천개수 및 홍수예경보 시설 보강

- 하천개수 완료를 당초 2011년에서 4년 앞당긴 2007년까지 조기 추진 (건교부)
-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건교부)
- 홍수예경보 시설을 2001년까지 확충(건교부)

2. 제도적 측면에서 수방관련 법령 강화

- 유수지 설치 의무화등 도시기본계획 관련규정을 정비(건교부)
-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확대 시행되도록 법령 정비(행자부)

3. 간접적인 홍수예방 대책으로서 산림정비(산림청)

-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계획」을 2007까지 추진
(5대강 본류 양안 5km 이내 101만 ha)

※ 홍수조절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음

<홍수조절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사유>

- 환경생태계 훼손정도 및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검증된 실증이 부족
 - * 영월댐 공동조사단이 홍수조절댐 사례로서 제시한 일본의 무코가와 댐은 아직 건설중인 댐으로서 실증된 효과는 없음
-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이 매우 낮음 (건교부 분석 B/C 0.31)
- 홍수조절댐 추진시 영월동강에 다시 댐건설 논란 재연

2. 물不足 對策

□ 관계기관 제출안

기 관	내 용
건교부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재수립 · 앞으로는 물수요관리 강화 및 지하수, 해수담수화등 취수원의 다변화가 필요 ·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에따라 현행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재수립하여 21세기 물부족에 대비 2. 기존수력발전댐의 다목적댐화 필요 · 화천댐등 수력발전댐을 용수 및 홍수조절기능의 다목적댐 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댐관리를 수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이럴 경우 영월댐의 1.2배 효과(홍수조절 2.3억톤, 용수공급 4.6억톤/년)가 있으므로 1조원 이상의 신규댐 건설비 절감 · 수력발전은 전체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미만으로서 다목적댐화 하더라도 전력량의 0.05%만 감소
산자부	1. 발전댐의 수공으로 관리 일원화에 반대 · 전력공급에 차질발생 ·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시책에 위배 · '99년 한전과 수공으로 구성된 한강수계댐통합협의회를 통해 이미 제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므로 관리일원화는 불필요

기 관	내 용
환경부	1. 물수요관리 적극 추진 · 절수기 및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노후수도관 교체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추진으로 2006년까지 수도권 지역 수돗물 급수량의 13.5%인 4.1억톤 절감 · 민간주도의 물절약 적극 추진 * 2000. 2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경기도	1. 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발전댐을 수공으로 관리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

□ 對 策

1. 물수요관리 적극 추진 (환경부)

- 절수기 및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노후수도관 교체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추진(2006년까지 수도권지역 수돗물 급수량의 13.5%인 4.1억톤 절감)
- 민간주도의 물절약 운동추진에 적극 지원

2.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건교부)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재수립하여 21세기 새로운 수자원 정책방향 재정립

3. 화천댐등 기존 수력발전댐을 용수 및 홍수조절기능 위주로 운영

- 현행 한강수계댐통합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화천·팔당댐등 발전 전용댐이 용수 및 홍수조절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건교부는 적극 협조 추진
 - 기존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댐 건설수요의 부담 완화
 - 원자력, 화력, LNG등 대체방안이 다양한 전력공급 부분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력발전 비중이 60년대의 20% 수준에서 2%정도로 감소했고, 용수 및 홍수조절기능 위주로 운영하더라도 전체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비해 이들 발전댐을 용수 및 홍수조절 위주로 운영할 경우 한강의 댐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능력이 상당량 증가
- * 공동조사단이 제시한 효과 : 용수공급 46억톤/년, 홍수조절 2.3억톤
- 다만, 관리권 일원화보다는 관련기관의 행정협조로 운영 효율화
 - '99년 총리실, 건교부 산자부, 한전, 수공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제정된 한강수계댐통합운영규정(건교부훈령)의 제정에 따라 이미 운영중
 - 관리권 일원화를 위한 소유권 이전시 소요되는 막대한 매입재원 마련의 어려움등이 예상됨
- 향후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합동점검 및 분석 평가
 - 매년 홍수기가 끝나는 9월까지의 운영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평가 실시(개선점이 필요할 경우 재검토)

3. 環境保全 對策

□ 관계기관 검토의견

기관	내 용
환경부	1. 단기적으로 동강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연휴식지 지정 추진 2.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검토 3.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도입 추진
강원도	1. 단기대책으로 · 휴식지 지정 및 예약제활동 통제를 위해 예약제 운영 · 지정장소의 야영금지등 탐방객 통제관리 ·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행위 중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등으로 쓰레기투기 방지 2. 장기대책으로 『동강종합관리계획』 수립추진 (2000.9.22 용역발주)

□ 對 策

- 래프팅 및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환경훼손이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대책으로서
 - 동강지역 체계적관리를 위한 자연휴식지 지정 추진(환경부, 강원도)
 - 예약제 운영등으로 래프팅활동 통제강화(강원도)

- 지정장소의 야영금지, 주차장확대등으로 탐방객 통제관리(강원도)
-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행위 중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등으로 쓰레기투기 방지(강원도)
- 중장기 대책으로서 『동강종합관리계획』을 내년까지 수립추진(강원도)하고 생태보전지구 지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환경부)
-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도입

4. 地域住民 支援 (江原道 建議)

<주민 현황 및 요구>

- 댐예정지내 주민 : 526세대 1,800여명
- 부채현황 : 396농가 125억원
 - 특별경영자금 부채 : 78억원(연리 6.5%)
 - 상호금융자금 부채 : 47억원(연리 12.6%)
- 주민요구 : 농가부채 125억원에 대해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정부 특별자금 지원 요구

□ 강원도 건의내용

- 주민 부채경감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총 837억원중 국고 501억원 지원 요구 (이중 125억원은 특별자금으로 융자지원)
- 농가부채 125억원에 대해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정부 특별자금 지원 (주민요구와 동일)

- 영농지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해 2001~2005간 특별 지원사업비 376억원을 정부에서 지원 (우선 2001년에 113억원 책정요망)
- 특히, 영농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 부분은 사업내용이 다양하지만 정부예산에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단일예산으로 편성요구

<강원도 요구 세부내용>

1. 농가부채 부담완화

- 농가부채 128억원중 125억원에 대해 국고로 장기저리 『특별 자금』 융자 지원
- 나머지 상호금융자금과 특별경영자금 부채간의 이차보전 (2억원) 및 연체이자 면제 (1억원)는 지방비에서 지원
- 금융기관 대출자금 상환유예 조치(년말까지 20억원)는 지자체에서 금융기관과 협조

2. 영농지원 및 정주기반시설 확충(709억원중 국고 376억원 지원)

- 영농지원 : 영농자재 지원, 생산기반조성사업, 유망작목입식, 유망작목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암반관정개발, 축산지원, 농업관광지구조성
- 기반시설 : 농가주택 개량사업, 농로 확포장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접근도로망 확충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 동강관리 :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 래프팅활동 이용관리

□ 對 策

○ 농가부채 부담완화

- 본 지역주민의 특수한 사정과 '99년의 전례를 감안하여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연리 12.6%)을 저금리의 영농자금(연리 5%)등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방안 적극 강구 **(농림부)**

* '99년 농림부에서 특별경영자금 지원(223가구 46억원)

- 고금리와 저금리 차이에따른 이차보전은 '99년의 전례에 따라 지원 **(강원도)**

* '99실적 : 상호금융 이차보전 및 연체이자 경감(331가구 1억원)

-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등은 강원도가 농협등 금융기관과 적극 협의 조치**(강원도)**

※ 특별자금(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지원 용자는 도시계획구역 또는 그린벨트지역등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영농지원 사업 및 지역정주 기반시설 확충 등

- 영농지원, 지역정주사업 지원등 각종 사업은 사안별로 소관기관에서 검토 지원 **(행정자치부, 농림부)**
- 본지역 주변의 하천개수사업, 국도사업(국가지원지방도) 등은 우선 반영되어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건교부)**
- 예산편성시 타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치 **(기획예산처)**

○ 특별교부세등 지원방안 검토

- 강원도에서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특별 교부세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행정자치부)**

IV. 後續措置

☐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 관련기관은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 수립 추진
- 주민지원을 위한 부채경감과 영농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세부계획은 강원도가 행자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립 추진
 - 협의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주민지원대책추진 상황 점검

- 원활한 주민지원이 추진될수 있도록 수질개선기획단은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및 강원도등 관련기관의 지원상황 점검

☐ 영월댐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

- 기확정된 영월다목적댐의 백지화 및 홍수조절댐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댐예정지 지정고시 원인행위가 사실상 소멸

* 지정면적 : 22.7km² (688만평 : 정선군 52%, 영월군 33%, 평창군 15%)